

# 統一以後 國民統合方案 研究

1994. 12.

朴 英 鎬(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 要 約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정책이나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통일한국의 政治·社會的 葛藤에 대한 해소방안이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특히 상호 이질적인 체제가 통합되는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새로운 통일국가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남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망한 후 통일한국에서의 갈등양태를 분석하고, 갈등해소의 맥락에서 政治·社會的 統合을 위한 새로운 국민형성의 정책 방향 및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의 조기 실현 가능성은 객관적인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허한 말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북한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궁극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현실적으로 統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의 문제를 논하려면 우선 통일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統一韓國의 문제, 특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통

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도 남북한이 점진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기본구도를 논의의 전제로 한다.

점진적·평화적 통일로 성립되는 통일한국의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극도로 감소되고 첨단 과학기술 정보가 지배하는 신산업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사회가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은 정치·경제 및 사회의 제반 측면에서 자유, 복지 및 인간의 존엄성이 고도로 구현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상은 통일이 되었다고 금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의 발전 및 지역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등 제반 葛藤構造의 해결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상호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통합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國民形成(Nation-Building)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한국에서의 갈등양태와 그 해소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의 한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은 통일정책 차원에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통일독일의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한반도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동서독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한국사회 내부의 동질성은 사회

적 불평등성, 지역감정 등으로 인하여 舊서독에 비하면 훨씬 약하여 통일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부의 異質性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적·물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는 명분에 치우치거나 상호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한 뒤로 미루고 남북한간 공감대형성이 가능한 전통문화·언어·음악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民族同質性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연후에 대중매체의 개방 등을 통하여 남북한사회를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이 강한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 물가문제, 높은 세금부담 등에서 비롯되는 남북한주민간의 이질화현상은 통일이 달성될 경우 발생될 소지가 크다. 더구나 남한사회의 地域感情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채 통일이 될 경우, 통일 후 지역감정은 증폭되어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통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갈등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선 政治教育을 통하여 북한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의 사회·문화제도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일한국에서의 내적 통합을 이루는 문제는 이상적인 형태의 삶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로써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葛藤管理의 문제는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가에 의존한다.

남북한의 政治·社會的 變化는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으나 대체로 남한에서는 다원주의 정치체제가 제도화될 것이며, 북한에서는 탈전체주의화와 제한적 다원화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남북한의 지역적 편차가 여전히 잔존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이념 및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남북한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통범위를 넓혀가는 등 남북한간에 상호 수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多元主義體制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속도와 함께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갈등구조와 양태는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 통일 이전 남북한 지역에서의 갈등구조와 양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국가가 선택한 이념체계, 정치·경제제도 및 사회체제 등에 따라서 새로운 갈등구조와 양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統一韓國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것인 바, 체제의 구조적 차이 및 기능 수행상의 차이, 구체

제 청산과정, 북한지역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 남북한간의 지역감정, 상이한 사회화 과정에 따라 고착된 생활문화의 차이 등이 갈등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정치과정, 생활규범 및 가치체계 등의 차원에서 同質的인 規範과 節次를 남북한주민이 공유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어 새로운 국민형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향을 배태시킬 수 있는 新정치문화를 구축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사회적 안정의 달성을 위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무의식적인 합리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한주민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는 작업은 결국 새 국가의 國民的 正體性(National Identity)을 확립하는 일이다.

통일한국은 정치적 경계와 인종·문화적 경계의 일치라는 점에서 민족국가의 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사회적 동질성이나 국민적 콘센서스의 확립은 정치엘리트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주민간의 心理的 統合 촉진, 즉 한국국민의 재형성과 배타적인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로부터의 탈피라는 두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남한지역 국민들의 희생적인



물질적·도덕적 노력이 요구되며, 후자의 경우 북한지역 국민들의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될 것이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통일한국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분단상황의 방치는 韓半島의 永久分斷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가능성과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변화적응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南北韓의 統一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기 보다는 주변국가들의 이기적인 헤게모니 추구에 따른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자체적인 체제역량의 구축과 통합시 예상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對국민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통일은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두개로 나누어진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단계적인 통일 준비는 民族共同體를 형성·운영하고 민족사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 目 次

第Ⅰ章 序論: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문제인식 .....	1
第Ⅱ章 理論的 準據와 獨逸의 經驗 .....	6
1. 이론적 근거 .....	8
가. 갈등의 발생과 갈등 주체 .....	8
나. 갈등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 .....	11
다. 갈등의 해소와 통합 .....	17
2. 독일의 경험 .....	19
가. 동서독 지역간의 이질성문제 .....	20
나. 새로운 갈등현상의 출현 .....	24
다. 동독지역주민 정체성위기의 타개책 .....	27
라.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34
第Ⅲ章 南北韓 政治·社會體制의 變化와 統一韓國社會 展望 .....	37
1. 남한의 변화 .....	38
2. 북한의 변화 .....	46
3.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 사회 전망 .....	58

<b>第IV章 統一韓國社會의 葛藤構造와 樣態</b> .....	61
1. 지속적인 갈등양태 .....	63
가. 남한지역에서의 갈등양태 .....	65
나. 북한지역에서의 갈등양태 .....	72
2. 새로운 갈등구조 및 양태 .....	75
가. 정치적 차원 .....	75
나. 경제적 차원 .....	77
다. 사회·문화적 차원 .....	78
<b>第V章 國民統合方案: 갈등해소의 맥락에서</b> .....	83
1. 기본방향 .....	84
2. 갈등해소 방안 .....	86
가. 정치적 차원 .....	86
나. 경제적 차원 .....	92
다. 사회·문화적 차원 .....	95
<b>第VI章 結 論: 통일 이후를 위한 우리의 과제</b> .....	101
<b>參考文獻</b> .....	111

## 第 I 章 序 論: 統一國家의 未來像과 問題認識

21세기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여러 해의 연구끝에 마련한 한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는 “21세기에는 한민족의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민족공동체의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sup>1)</sup>라고 통일을 전망하고 있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南北頂上會談과 같은 긍정적 징후로써 뒷받침될 수도 있는 반면, 객관적인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허한 말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미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며 통일 이후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정치학계도 예외는 아니다.<sup>2)</sup> 사실 21세기를 바로 눈 앞에 둔 시점에서 국가의 향후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北韓社會主義體制가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궁극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현실적으로도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 1994. 5. 2), p. 3.

2) 통일한국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연구보고서들인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1991), 「통일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1994) 등이 있다.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1993년도 제3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의 주제는 統一韓國의 未來像이었다. 그 결과는 학술대회는문집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의 문제를 논하려면 우선 통일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統一韓國의 문제, 특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통일독일의 경험이나 통일 이후 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분단상태가 된 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룬 예멘의 경우를 통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모두 변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도 북한체제가 內的 矛盾에 의해 갑작스럽게 붕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독일의 경우와 같은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보고서는 남북한이 점진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sup>3)</sup>를 논의의 전제로 한다.

점진적·평화적 통일로써 성립되는 통일한국의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극도로 감소되고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新산업사회가 될 것이다. 그 사회가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은 정치·경제 및 사회의 제반 측면에서 자유, 복지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구도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및 인간의 존엄성이 고도로 구현되는 사회일 것이다.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정치체제면에서 참여민주주의가 활발하게 기능함으로써 국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성숙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체제면에서 경제의 자유원리, 사유재산권, 자유경쟁과 유인제도에 의한 능력과 창조성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위에서 분배의 정의, 빈부격차의 축소, 정당한 임금 등이 실현되는 고도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그리고 사회체제면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향유하고, 다원화된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참을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民主的 多元主義 社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차적인 국가적 과제의 하나는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더불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안정화시키면서 민족 전체의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상은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고도발전 뿐 아니라 지역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등 제반 갈등구조의 해결을 통해 개인 및 집단차원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전체차원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國民統合이 달성되어야 한다.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통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

가 없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통일 이후 내적 통합을 달성하는 문제이다.<sup>4)</sup>

남한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의 발전정도나 성숙도에 있어 舊서독의 수준에 훨씬 뒤져 있는 반면에 남북간의 이질화 정도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통일이 남북간에 가져다 줄 충격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은 바로 새로운 政治文化를 창출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형성(Nation-Building)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한국에서의 갈등양태와 그 해소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의 한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은 통일정책의 차원에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Ⅱ章에서는 우선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갈등양태와 그 해소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러나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갈등양태와 그 처방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4) 독일 통일 후 지난 4년동안의 동서독 주민들간의 내적 통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로타 드 페지에르, “독일통일의 비판적 고찰,” (민족통일연구원, 1994.11) pp. 13~21 참조.

준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統一獨逸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경험적 자료를 찾고자 한다. 第三章에는 단계적 통일을 상정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등장할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볼 것이다. 第四章에서는 통일한국사회에서 국민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상정할 수 있는 제반 갈등양태를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第五章에서는 갈등해소의 맥락에서 정치·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국민형성의 정책방향 및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第六章에서는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국민통합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사회가 미리 준비해야 할 내적 통합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第II章 理論的 準據와 獨逸의 經驗

모든 사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구성원들간에 권력, 부, 명예, 지위, 신념, 이념, 종교 등 인간이 추구하는 제반가치의 측면에서 葛藤이 존재한다. 그것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 각자의 이익과 욕망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만족스럽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소집단간, 사회간, 국가간에 따라서 달리 표출되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또한 동일한 나라에서도 발전정도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표출되는 갈등현상이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더욱이 現代産業社會의 발전에 따라서 갈등은 더욱 많은 분야에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어떤 한 사회의 갈등은 그 사회의 생태적 및 사회적 발전수준과 그 사회의 특정한 외부환경과의 相互作用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산물인 것이다.<sup>1)</sup>

이러한 갈등현상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처방을 구하기 위해서 갈등을 설명하기 위한 理論들도 구조기능론을 비롯하여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계급론, 대중사회론, 다원주의론

1) Marc Howard Ross, *The Culture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Intere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 15.

등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또한 갈등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행태주의적 접근법, 역사적 접근법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시각이나 이론, 그리고 접근방법만 가지고는 결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현상을 제대로 조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韓國社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현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2)</sup> 더욱이 미래의 문제인 통일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필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몇 가지의 理論的 準據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은 한국사회가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고 더욱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분석준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독일의 경험에 대한 검토는 남북한의 통일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할 지라도 최소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행되는 독일 정부의 제반 노력이 統一韓國에서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준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송 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현대문화, 1991), p. 13.

## 1. 이론적 준거

갈등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的 葛藤이란 한 마디로 현재의 상태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배태되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사회적 갈등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이해가 상충하는 개인·집단·조직·정파·지역간의 불화현상을 말하며, 이슈의 성격과 구조, 이해당사자의 범주, 갈등표출의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sup>4)</sup>

### 가. 갈등의 발생과 갈등 주체

#### (1) 갈등의 발생

개념적으로 葛藤은 물질 또는 상징적 자원의 배분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목표가 양립하지 않거나 또는 인식한 이해관계가 달라 행동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5)</sup> 즉 두 개 이상의 실체가 상호 화합될 수 없는 목적

3)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1992), p. 113; 본 연구에서 갈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반 논의는 이 책에 주로 의존하였다.

4)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2), p. 566.

5) Marc Howard Ross, *The Culture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을 추구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으며, 政治的 葛藤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권력, 명예, 또는 물질과 같은 가치있는 것들에 대한 권위적 배분문제와 관련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6)</sup>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적 갈등은 諸사회적 관계에서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불만의 누적으로 기존 사회관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기존의 상태를 수정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價値觀의 對立을 둘러싼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한 가치의 내용은 인간의 구체적 삶 속에서 형성되고 재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 삶 속에서 체현되지 못하는 가치는 그 적합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가치로 대체되기 마련이다.<sup>7)</sup>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正當性 問題는 회소가치 대상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회소가치 대상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며,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가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인 이러한 分配上의 不平等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sup>8)</sup>

---

*Intere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 16.

6) 고병철, “남북한 갈등의 구조,” 한배호·박찬욱 공편, 「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방식」 (서울: 법문사, 1992), p. 194.

7)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p. 114~17.

8) 위의 책, p. 118.

아무리 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불평등의 당사자가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을 때 현재의 상태는 지속될 뿐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사회관계의 정당성이 의문시되고 거기에 바탕을 둔 불만감이 일정한 수준을 경과하는 것이 社會的 葛藤 발생의 필요 요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주체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갈등이 현재화되는 것이다.<sup>9)</sup>

## (2) 갈등주체의 형성

社會的 葛藤은 갈등주체의 구체적 행동에 의해 야기된다. 물론 모든 사회적 갈등이 언제나 새로운 주체의 의해서 야기되고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회적 갈등이 기존 체제 내에 비교적 별무리없이 흡수되는 사회에서는 갈등의 주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보다는 이미 그 조직이 형성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집합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分斷國家의 統一과 같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경우 새로운 갈등주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갈등주체는 물론 현재의 상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顯在的인 집단으로 등장

9) 갈등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Ted R.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p. 22~58 참조.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잠재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擬似集團으로 우선 존재한다.<sup>10)</sup>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기존 체제가 흡수하지 못할 때 갈등은 현재화된다. 만약 갈등의 주체가 기존의 전체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테두리 안에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형성되는 경우, 그 집단은 보다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성원 상호간의 유대를 확립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나. 갈등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

##### (1)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등을 수준에 따라 분류할 경우 집체간의 갈등, 단체 내부에서의 갈등, 단체간의 갈등, 공동체간의 갈등, 국가간의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갈등의 쟁점, 수단 및 방법, 당사자 등의 기준에 의한 類型을 살펴보고,<sup>11)</sup> 주요한 갈등의 원천을 살펴기로 한다.

우선 갈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면, 차이

10) Ralph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p. 179~82.

11)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p. 292~327.

에 의한 갈등(dissensual conflict)과 동일한 목표를 둘러싼 갈등(consensual conflict)이 있다.<sup>12)</sup> 차이에 의한 갈등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궁극적 목표가 서로 양립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갈등을 말한다. 예컨대 價値觀의 對立이나 이념분쟁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차이에 의한 갈등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다는 이질적인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일한 목표를 둘러싼 갈등은 목표가치대상의 稀少性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한정된 재화를 둘러싼 갈등이나 권력 및 사회적 명성획득을 둘러싼 갈등이 이에 해당한다.

갈등의 수단 및 방법에 따른 유형에는 폭력적 갈등과 비폭력적 갈등,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 그리고 공개적 투쟁과 비공개적 투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폭력적 갈등보다는 폭력적 갈등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빈도수가 높으며, 일방의 갈등 당사자가 상대방에 비해 힘의 열세에 있을 때 은밀하고 비합법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하기가 쉽다.

葛藤 當事者를 기준으로 한 유형에는 당사자의 규모와 기존 관계에 따른 유형과 당사자의 현실인식에 따른 유형이 있다. 당사자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독립적 관계의 갈등, 동등한 하위집단간의 갈등, 그리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갈

12) Leon Kriesberg, *Social Conflic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2), pp. 30~35.

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當事者의 現實認識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실적 갈등과 비현실적 갈등이 있다. 현실적 갈등은 갈등의 객관적 근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말하며, 비현실적 갈등은 갈등 당사자가 축적된 불만을 換置 메카니즘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sup>13)</sup> 한편, 도이취(Morton Deutsch)는 갈등주체의 현실인식과 갈등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진정한 갈등, 조건부 갈등, 쟁점이 환치된 갈등, 당사자가 잘못 전가된 갈등, 잠재적 갈등, 인식의 오류에 의한 거짓 갈등 등 6가지의 葛藤類型을 제시하였다.<sup>14)</sup>

갈등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해로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방지함으로써 社會秩序를 유지하고자 한다. 집단간에 생기는 갈등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근원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① 부족한 가치물을 획득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또는 권력의 갈등, ② 타인의 신념을 전향시키려는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념적 갈등, ③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하려는 욕망에서 발생하

13) Lewis A. Coser, *The Functions Social Conflict*, 박재환 옮김,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1980), pp. 61~70.

14) 자세한 내용은 Morton Deutsch,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pp. 11~17 참조.



는 인종적 갈등 등이다.<sup>15)</sup>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요한 갈등의 원천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주요한 葛藤의 源泉으로는 ① 물질적 재화와 자원의 소유, 사용 및 분배에 관한 갈등, ② 지위·명예와 퍼스낼리티의 양양에 관한 갈등, ③ 타자의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데 대한 갈등, ④ 가치에 관한 갈등, ⑤ 역할에 관한 갈등, ⑥ 상반된 이데올로기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 (2) 갈등의 사회적 영향

사회적 갈등은 이해당사자간의 치열한 相互作用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과 기존의 사회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태도와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개별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게 된다. 치열한 社會的 葛藤은 경험 당사자 개인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관계가 변화되고 조정되는 양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은 기존 사회관계의 공고화 및 재조정, 그리고 혁명적 갈등의 결과 등

15) 고병철, “남북한 갈등의 구조,” 한배호·박찬욱 공편, 「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방식」 (서울: 법문사, 1992), p. 196.

세가지의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sup>16)</sup>

첫째, 사회적 갈등이 갈등주체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경우이다. 갈등현상은 일반적으로 우리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대항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과 적대성을 조장하며, 동질성이 강한 近親集團에 대해서는 연대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7)</sup> 그러나 특정한 사회적 갈등은 갈등 당사자들의 기존의 역학관계를 더욱 고착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갈등이 당사자 상호간의 기초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개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은 갈등집단 모두에게 일정한 態度的 變化를 유도하게 한다. 어떤 특정한 사회적 갈등은 집단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태동시키기도 하며, 기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다양한 하위체계들의 요구를 조정해야 하는 국가의 경우는 특정의 하위체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국가는 국내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로서 하위집단간의 갈등이나 하위체계의 국가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하위체계간의 기존의 관계나 上位體系와의 관계가 재조정되기도 한다. 사회 각 부분에서 분출하는 요구가 갈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구체화되지 못할 때 상위

16)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p. 329~50.

17) Lewis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pp. 153~55 참조.

체계에 대한 하위체계의 도전은 혁명적 갈등으로 분출하게 된다.

셋째, 한 사회내의 모순이 기존의 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체계 전체의 대대적인 균열로 발전할 때 그 사회는 革命的 葛藤狀況에 빠지게 된다. 혁명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와 과격성에 있어 사회내의 어떠한 갈등보다 심대할 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부정 내지 전복이라는 함의까지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엄청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은 동구주민들에게 인식 및 행태에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舊동독인들에게 서독체제로의 편입은 과거 질서의 전면적인 거부와 새로운 질서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한 사회에서 발생한 혁명의 결과는 그 사회가 처한 객관적 존재조건과 혁명에 관여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의 社會關係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한체제에 기반을 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사회의 변화는 단순한 표피상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혁명적 변화인 것이다. 따라서 革命的 變化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행태가 기존의 인식과 행태로부터 원만한 전환과정을 경험하지 못할 때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행위까지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 다. 갈등의 해소와 통합

갈등관계가 統合的 關係로 바뀌는 과정은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친화성의 정도에 따라 접근, 적응, 동화, 합일의 관계로 발전한다. 접근은 통합에로의 준비단계이고, 적응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일방적으로 또는 상호간 양자의 통합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同化는 차별이 극복되는 단계를 말하며, 합일은 상호간 협동을 결속하는 융합의 과정이다. 이러한 단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통합이란 통일을 촉진하는 수단적 의미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통일 이후에 이루어야 할 내적 통합, 즉 진정한 통일의 목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통일후의 社會統合이란 남북한 양쪽 지역의 체제가 상호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양 지역의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말한다.<sup>19)</sup> 이러한 상태가 달성될 때 비로소 통일국가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국민이 되었음을 진정으로 인식할 것이며, 남북한 지역 주민들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질 것이다.

갈등현상을 완화하여 統合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통합과 국민적 정체성 및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고무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갈등의

18)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 p. 182.

19) 위의 책, pp. 182~83.

정치·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sup>20)</sup>

일단 통합을 이루게 되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필요하다. 듀크(James T. Duke)는 일단 획득한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분단국가가 政治的 統一을 달성한 이후 대내적인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준거로서도 원용될 수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① 권력구조 또는 정권의 높은 정당성, ② 갈등이익에 대한 낮은 인식, ③ 모든 사회적 힘들의 통일, ④ 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낮은 착취, ⑤ 낮은 수준의 사회변동, ⑥ 사람과 그들 가치에 있어서의 고도의 동질성, ⑦ 낮은 외부의 위협수준, ⑧ 적정한 자원의 수준 등이다.<sup>21)</sup>

통일된 국가에서 國民統合의 目標은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국가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와 충성심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諸 가치들에 대한 공유성을 바탕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그러한

20) Anthony H. Birch, *Nationalism and National Integration* (London: Unwin Hyman Ltd, 1989), pp. 40~46.

21) James T. Duke, *Conflict and Power in Social Life*,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실 역, 「갈등과 권력: 갈등론적 사회학의 전개」(서울: 법문사, 1985), pp. 291~97.

가치에 대한 배분이 정당하게 실시됨으로써 욕망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諸사회적 힘들을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위에서 국민들의 葛藤水準은 항상적인 차원에서 조정되고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와 지도자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된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국민들이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는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한다. 권력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공통된 규범 및 가치체계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權力構造가 지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규범, 가치 및 행동체계를 본다면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안정적 발전은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독일의 경험

분단상태를 청산한 지 4년에 접어들고 있는 독일은 동서독 지역이 하나의 政治共同體를 형성하였다. 즉 정치제도, 경제체제, 군대통합 등 제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을 이루고 구 동독은 舊서독의 체제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통독 이후 동독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하였고, 동

독지역의 풍경이 급격히 변하는 등 東獨人들의 주변환경은 거의 모든 것이 변하였다. 즉 새로운 도로와 빌딩이 건설되거나 건설중에 있고 많은 거리의 명칭이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동상과 기념물들이 파괴되고 관광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주의의 구호들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는 상품선전 광고판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베를린장벽 붕괴시에 존재하였던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의 일체감은 통일 이후 급격히 약화되고 오히려 양 지역주민들간의 이질화현상이 점차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독일은 內部 統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 가. 동서독 지역간의 이질성문제

통일 이전부터의 교류와 통일후 독일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지역주민들간의 정신적·문화적 異質性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주민의 국가관, 생활방식, 신념 및 가치체계 등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이 아직 통일독일의 새로운 제도와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독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 지역 주민간의 社會心理的 갈등문제는 통일 당시만 해도 서독시민들이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긍지를 가졌고 동독인들은 통일 후 서독

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기대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통일이 된 후 4년이 지난 지금 동독인들의 經濟水準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서독지역주민들은 통일이 된 후 세금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이주민때문에 발생하는 주택·범죄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안정의 저해를 우려하는 반면, 동독지역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실업문제, 물가등귀문제 등으로 心理的 葛藤이 증폭되어 동서독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사회심리적 일체감이 쉽사리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은 오시스(Ossis), 베시스(Wessis)라고 상대지역 주민을 부르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西獨地域 주민들은 동독지역 주민들을 오시스라고 부르는데, 시골뜨기라는 경멸의 의미를 지닌 이 용어의 바탕에는 서독인들이 천신만고 끝에 축적한 부가 동독인들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 대한 서독인의 반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東獨地域 주민들은 서독지역 주민들을 베시스라고 부르는데, 졸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에는 서독지역 주민들이 자본주의경제 덕택으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sup>22)</sup>

통일후 독일정부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동독경제의 수준이 공식 통계로 발표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사실이었

22) Wessis와 Ossis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 214~18참조.



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통한 생활격차의 해소가 당면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통일을 달성한 후 內的 統一을 완성시키는 작업에서 독일정부가 가장 우선 순위에 둔 정책은 사회주의적 경제·사회체제를 자유와 사회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시장경제질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sup>23)</sup> 특히 물질적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동독지역 주민의 正體性危機는 양지역간 생활격차가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양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이질성으로 부터 발생한 동독지역 주민의 정체성 위기문제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체제에 대한 適應過程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sup>24)</sup> 첫째, 통일 이후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의 동독주민은 자본주의의 사회제도 파악 및 적용문제로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집단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성과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행동양식으로의 대체가 어렵다. 셋째, 사회주의하에서 보장되었던 직장이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자

23)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Vier Jahre Deutsche Einheit," 3, Oktober 1994 (1994. 9. 19), 주독대사관, "독일 통일 4주년 보고서" (1994. 10), p. 18.

24) 황병덕, "동·서독 통합후 갈등문제," 「평화통일연구」, 창간호 (세종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4. 8), pp. 174~75.

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동독지역주민들은 勞動市場의 競爭關係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더욱이 동독의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실업문제는 동독지역 주민의 물질적 생활기반과 자아 실현의 토대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과거의 노동이 무가치한 곳에 투입되었다는 자기비하감을 주고 있다. 넷째, 동독지역 주민은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지역의 제반 지원을 단순히 시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스스로를 2等市民으로 느끼고 있다. 더욱이 서독지역 주민들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도록 자문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동독지역 주민들의 열등감은 가중되고 있다. 다섯째, 자기소유재산이 언제 서독지역의 원소유자로부터 반환신청이 제기될지 모르는 미해결 재산권문제로 인해 많은 동독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여섯째, 40여년간의 東獨社會主義는 동독지역 주민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의 단죄는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공범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통독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될 때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본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와의 단절은 自己 歷史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개인 및 집단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새로운 정

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다수 독일국민들도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독의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민주적 사회·교육제도에 적응하여 서독지역 주민들과 一體感(gemeinsame Identität)을 이루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sup>25)</sup>

#### 나. 새로운 갈등현상의 출현

동독지역 주민의 사회심리적 정체성 위기현상은 특히 동독지역에서의 사회범죄 급증, 네오나치즘 등장,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 및 공격행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통일 후 서독지역에서는 소매치기, 강도 등 一般犯罪가 20%정도 증가한 반면, 동독지역, 예를 들어 드레스덴에서의 이러한 일반 범죄는 동독 체제 하에서보다 거의 4~5배 정도 급증하였다.<sup>26)</sup> 독일전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 방화 및 폭력사건은 1991년 1~9월 기간동안 500건을 상회하였는데,<sup>27)</sup>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독지역의 빈민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한편, 신설 5개주

25) 이에 반해 경제재건을 통한 생활격차의 해소문제는 서독지역 주민의 30%, 동독지역 주민의 39%가 5년 이내에, 서독지역 주민 82%, 동독지역 주민 90%가 길어야 10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연방내무성이 실시한 구동독지역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주독 대사관 내부자료, 1991. 9) 참조.

26) *Der Spiegel*, 42/1991, p. 33.

27) *Ibid.*, p. 37.

의 극우 폭력세력의 숫자는 서독지역보다 3배나 많은 약 10,000만~15,000천명으로 독일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볼프강 브뤼히(Wolfgang Brück)와 같은 범죄사회학자는 1991년 약 50,000명 정도의 동독지역 청소년들을 극우지향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sup>28)</sup> 이는 1990년 12월 실시된 全獨議會選舉에서 동독지역 18~25세 청소년의 7%(약 40,000명)가 극우정당인 공화당에 투표하였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소위 스킨헤드(Skin Head)로 통칭되는 극우청소년들이 외국인들을 공격하고 좌파세력의 건물을 불태우고 유태인 묘지를 훼손하는 등 공공연한 폭력행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정부는 新나치세력을 감시하는 헌법수호청(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을 동독지역에 설립하여 극우세력의 폭력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실업문제, 낙후된 생활수준 등 스스로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사회적 지위향상의 도모는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相對的 剝奪感은 극우지향적 폭력행사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이 동독체제에서 그 동안 반파시스트 교육을 받아온 동독주민에게 발견된다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동독지역 청소년

---

28) *Der Spiegel*, 22/1991, p. 80.

들이 극우성향을 띄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sup>29)</sup>

기존 사회주의가치관이 전면적으로 해체된 후, 범게르만 민족주의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이념체계의 구심점과 사회경제적 고통의 탈출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패전 이후 억눌렸던 獨逸民族主義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던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2월 통일완성시기까지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통일 이후 전승 4개국으로부터 패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독일국민들은 동서독지역을 막론하고 '통일게르만'의 민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정치권 역시 이에 부응·동조하여 독일은 범게르만 민족주의의 르네상스를 맞게 되었다.<sup>30)</sup>

동독지역에서의 극우세력문제는 이 지역 특유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독일의 민족주의적 경향 뿐만 아니라 과거 동독체제의 内部構造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31)</sup> 비민주적인 동독체제

29) *Der Spiegel*, 22/1991, p. 80; 극우세력의 준동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행위는 통일 전 서독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독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여 실업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업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1960년대 경제호황시 노동력부족을 타개코자 초청한 외국노동자(가족포함, 4~5백만명)들을 대상으로 표출되었다.

30)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독일하원이 격론 끝에 통일독일의 새 수도를 베를린으로 결정한 것이나 브란덴부르크 문위의 「승리의 女神像」을 베를린의 상징과 통일의 상징으로 복원시킨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1) 동독정부가 신나치세력을 단지 서독제국주의에만 존재하는 현상으로 선전하였으나, 동독지역의 극우청소년들 중 스킨헤드가 1987년 10월 유대교회의 방문객을 습격한 것은 보도되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동독지역의 극우세력대두 원인은 단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로만 돌릴 수 없고 과거 동독체제의 내재적 모

가 붕괴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극우적 사고와 행태로 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독국민들은 그 동안 정치적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 및 생활양식에 접할 기회가 적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잠재되어 있었고<sup>32)</sup> 전체주의체제 하에서 國際主義的 敎育을 받지 못한 결과 외국인들과의 교류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독일사회의 최저층을 형성하는 극우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계층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나 망명신청자들을 상정하고 보상심리에서 그들을 증오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다. 동독지역주민 정체성위기의 타개책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異質性問題는 4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상호이질적 체제가 서독체제로의 급격한 흡수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이질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독일정부는 정치교육프로그램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政治敎育(politische Bildung)<sup>33)</sup>은 동서독지역 주민의 경험 및

순에도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된다.

32) 일례로 1989년 말 2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서독지역에는 5백만이나 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서독국민들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독의 국제관계가 국제주의적 기조하에 형성되어 서독국민들의 외국인 적대감은 크지 않았다.

33) 현재 정치교육 담당기관으로 연방수준에서는 연방내무성 및 연방정치

인식상의 차이를 극복하여 정신적·심리적 일체감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시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즉 위로부터의 일방적 행정지침에 의한 강요형태의 政治教育은 히틀러독재로부터 통독이 될 때까지 이미 52년 동안이나 독재체제 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방법상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정치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독지역 주민들이 '정복자'로서의 우월의식이나 동독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분단의 克服過程에 동참하여 동독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이와 관련 서독지역의 주민들 역시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교육은 동독주민들이 과거의 부담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설

---

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들 수 있다. 연방내 무성은 예산만을 책정할 뿐, 연방하원에서의 각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정치교육의 총괄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각 주정부 산하에도 정치교육센터가 있으나, 현재 신설 5개주에는 주정부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지역 주정치교육센터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국가기관 이외의 정치교육담당기관으로는 각 정당소속 재단, 즉 기민당의 콘라드-아데나워(Konrad-Adenauer)재단, 사민당의 프리드리히-에버트(Friedrich-Ebert)재단, 자민당의 프리드리히-나우만(Friedrich-Naumann) 재단, 기사당의 한스-자이델(Hans-Seidel) 재단과 각 대학의 연구기관, 종교·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기관들은 연방정치교육센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체세미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치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하고 있다. 우선 정치교육은 모든 동독지역 주민의 생활영역 내에 남아 있는 ‘당의 진리규정의 독점성’ 잔재를 제거,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脫政治化하도록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 정치교육은 또한 국가의 명령에 익숙하여 항상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보호문화’(Nischenkultur)로부터 탈피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政治教育은 민주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또 갈등을 일방적으로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해나가는 ‘민주적인 논쟁문화’(demokratische Streitkultur)가 정착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특히 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성된 多元的 政黨構造에 익숙해지고 정치에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고무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방향은 동독지역 청소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연방정치교육센타 추정에 의하면 1% 미만만이 정치에 관심)과 소비·향락문화에 대한 심취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정되었다.

한편 정치교육은 동독주민들에게 社會的 市場經濟制度를 이해시키고 동독체제 하의 구조순응적인 행동양식을 시장경제에 맞는 창의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행동양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동독지역에서의 극우세력의 대두와 사회범죄의 증가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



들의 物的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최선이나, 차선책으로는 동독지역 주민의 체제적응문제를 해소하고 폐쇄적 시야를 국제주의적으로 넓히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독일연방공보처가 수행하고 있는데, 홍보의 주요 지침은 독일통일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統一費用 조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통일로 인해 사회안정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는 서독주민을 상대로 독일통일은 장기적으로 경제부흥을 가져오며, 통일사회의 건설은 청소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새 질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처해있는 동독지역주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하여 自由民主主義의 기본질서가 수립되고 법치국가와 자유로운 인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경제번영을 가져와 사회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사회단체 가운데 敎會가 동독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교육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지역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동독지역에 결여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간접자본(Kulturelle Infrastruktur)을 확충

하는 데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각종 협회·단체 등 자발적인 利益團體와 동호인 클럽들도 동독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동서독지역 주민의 이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후에 발생한 문제들은 예상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수습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up>34)</sup> 그러나 새롭게 발생한 문제들의 원천은 과거 동독의 사회통일당이 독재적으로 구축한 명령경제체제가 자유와 시장경제에 융합될 수 없다는 體質上의 問題에 있다. 한 사회의 전체구조를 억지로 통합하기 위해 극히 인위적이고 반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인 힘을 행사해 온 사회는 그 힘의 구조에 작은 이완요인만 발생해도 전체사회가 급속하게 해체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체현상은 구체적으로 생산활동체제 자체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일시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社會的 崩壞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과거 고초와 억압아래에서 동독인들은 민주적 자율성을 가질 수 없었고, 인민대중은 언제나 권력의 비호 아래 안주하는 피동적인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經濟生活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명령경제에서 소비자는 지시를 따르는 훈련만 받아왔을 뿐이고 자기 스스로 수요와 공

34) 황성모, 「통일독일 현장연구」,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90), p. 244.

급의 균형 속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러한 수동적 인간형으로 사회화된 동독인들이 통일후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自由市場經濟體制에 적응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실제로 빈번하고 깊은 단계적 통합접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과 냉전 절정기보다 더 심한 민족적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從屬關係가 형성되었다. 사실 통독후 2~3 개월만에 동독사회전반은 주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심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舊동독지역의 경제가 낙관적이나, 통일의 단기적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불안정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대다수의 동독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도입이 즉각적인 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統一費用 또한 예상보다 몇배 높아서 콜 서독수상은 선거공약과는 달리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고, 10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결국 통일 전의 정치적·이념적 분단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분단으로 대체되었다. 舊동서독지역간의 임금, 생활수준, 부의 차이로 인한 심한 긴장이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구동독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동독지역에 파업 및 사기, 부동산 및 외화투기, 은행강

도, 新파시스트의 발흥, 외국인기피증, 매춘, 마약, 자살, 교통사고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전혀 다른 법률, 행정 및 교육제도를 가진 두개 국가의 통합은 독일정치지도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은 성급한 흡수의 결과로 생긴 문제들의 일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균형적인 統一方法은 쌍방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대두될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강구할 시간을 제공하고, 가치관, 행동, 기대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올 심리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漸進的 統一方案은 신냉전적 이념분열이 지배하는 민족내부관계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다. 상호관용과 융통성에 기초한 합의형성 과정만이 어느 일방의 붕괴와 그에 따른 혼란과 폭력사태의 가능성을 방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개의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이념간에 합의형성을 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와 같은 대규모 이주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구하기 쉽지 않다. 다만 南北韓政權이 단계적 통합접근과 이념적 관용을 각자의 통일노력에 반영시킨다면 평화적인 해결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라.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통일전 동서독은 다방면에 걸친 문화교류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문화적 차원의 民族同質性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동서독의 사회적 가치체계가 혼용되어 서로를 공유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동독인들의 가치·규범체계가 서독사회지향적으로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형태로서 서독사회체제는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서독내부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서독체제가 동서독간 정체성형성문제를 서독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동서독간 文化交流는 서독사회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동독사회로 확장시켜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간 인적·물적교류가 시작될 경우,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동서독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한국사회 내부의 동질성은 사회체제의 불평등성, 지역감정 등으로 인하여 서독에 비하면 훨씬 약하여 통일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부의 異質性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적·물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독의 인적·물적교류가 시사하는 것처럼 남북

한간 인적·물적교류는 명분에 치우치거나 상호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남북한간 공감대형성이 가능한 전통문화·언어·음악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民族同質性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연후에 대중매체의 개방 등을 통하여 남북한사회를 본격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구성원의 정체성형성이 강한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통일후 통일의 후유증으로 주택문제, 물가문제, 높은 세금부담 등에서 비롯되는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이질화현상은 남북통일이 달성될 경우 남북지역 주민간에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남한사회의 地域感情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채 통일이 될 경우, 통일 후 지역감정은 증폭되어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이러한 이질성문제는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통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추진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사회제도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후 북한이 이념적으로 왜곡시킨 문화현상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政治教育을 통하여 북한지역주민들에게 한국의 사회·문화제도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극우세력의 대두 및 사회

범죄의 증가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주체사상 위주로 교육받아 極左民族主義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북한주민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사라지게 되고 물질적 재생산구조가 파괴될 경우 동독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극우적 민족주의이념에 동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사회범죄의 증가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이것의 근원적 원천인 남북한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과 함께 政治教育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질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나,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 第三章 南北韓 政治·社會體制的 變化와 統一韓國社會 展望

통일국가에서의 내적 통합 문제는 이상적인 삶의 달성보다는 葛藤管理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갈등관리의 문제는 결국 어떠한 발전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가에 의존한다. 그런데 통일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각각의 변화, 남북한관계의 변화, 그리고 주변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일 것이며, 반드시 바람직한 상태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상정한다면 통일 이후의 葛藤構造는 남북한 각각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으나,<sup>1)</sup> 본 논문에서는 정치이념, 정치체제, 사회구조의 변화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政治理念은 정치체제의 미래에

1) 예컨대 한배호 교수는 남북한 정치변화를 분석하는 개념들로서 가장 추상적인 정치구조로서의 「정치체제」라는 분석개념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남북한의 정치체제라는 구조와 그 하위구조인 정권의 관계 및 정권의 변화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남북한 정치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배호, “남북한 정치변화의 구조적 분석과 통일과정,”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pp. 137~160.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제도 및 절차에 대한 규정과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다.<sup>2)</sup> 즉 정치이념은 정치변화가 발생하는 이념적 공간으로서 정치변화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

政治體制는 그 사회의 이익균열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러한 이익균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정치참여 기회의 증가, 정치세력간 권력분포형태와 새로운 형태의 권력분포 형성여부, 정치엘리트간 갈등, 저항세력에 대한 대내외적 지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sup>3)</sup> 한 사회내의 政治·社會的 葛藤이 표출되는 양상은 각 나라의 정치이념과 제도의 형성정도,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상호관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 1. 남한의 변화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는 사회주의체제의 人民民主主義方式이 경제체제의 관리와 정치적 갈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2)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4), pp. 5~10.

3) Sidney Tarrow, "Aiming at Moving Target: Social Science and Recent Rebellions in Eastern Europe," *PS*, vol. 24, no. 1 (March 1991), pp. 13~18.

것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회내의 정치세력간의 이념대결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이념대결에서 自由民主主義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적 절차, 다원적 질서, 참여기회의 공평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남한의 정치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으로서도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현재 남한의 문민정부가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나, 民主化過程은 재권위주의화나 쿠데타의 발생, 혁명적 상황의 전개, 장기적 정치불안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역전될 수도 있다. 민주화과정은 단선적이고 누적적이며 필연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전과 반복이 가능하고 斷折과 不確實性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통일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민주주의 이념의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민주주의 이념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배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사회적 갈등이 기존의 제도적 틀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이념의 정착여부는 民主的 節次를 제도화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익조정 메카니즘을 만들어 내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계층이 환경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 각종의 新사회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sup>4)</sup> 향후 남한사회의 民主主義가 보다 발전된 모습을 띠기 위해서는 시민계층이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현실에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부문의 영향력이 축소와 시민사회의 독자적 질서유지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민주주의체제의 정착은 市民社會의 자율성 확보와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균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 밖에서 개인들과 집단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서 조직되는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의 社會活動領域”<sup>5)</sup>을 의미한다.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획득하고 각 영역에서 사회 하부단위의 자율적 규제와 이익조정이 가능하게 될 때 국가와 시민사회는 均衡關係를 이룩할 수 있다.

앞으로 남한사회가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간 균형과 의회정치 및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 한완상,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p. 9~25.

5) David Hel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6.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남한의 경우, 산업화가 시민사회의 선행조건인 시장, 개인주의, 다원주의, 계층화현상 등을 수반하였지만 국가우위의 전통, 시민사회의 비조직화, 사회의 이익균열구조와 무관한 정당구조, 선거와 정치과정의 비합리성, 정치엘리트간 타협문화의 결여 등으로 아직까지 國家와 市民社會의 關係가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을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독자영역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도 자율적 행위규범과 다원주의 문화가 내재화되어 있어야 한다.<sup>6)</sup>

한편 시민은 私的 利益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장사꾼」의 성격과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공영역의 확보를 중시하는 「公人」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sup>7)</sup> 시민은 반드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틀내에서 국가개입과 계급지배의 중화를 모색하며 시민문화의 헤게모니를 받아들이고 있는 집단과 계층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시민계층들도 階級的 利害關係에서 벗어나서 민주적

6)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시민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p. 75~82.

7) 이와 관련하여 양승태는 “시민적(civil)이라는 용어는 문화·도덕적 가치나 보편적 사회질서를 실현하거나 실천을 지향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부르쵸아는 물질적 가치 혹은 재산이라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되 한정적인 가치의 소유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양승태, “무존재 역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언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 343~348.

이고 개혁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현실적 토대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열망이 議會民主主義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수렴될 때 남한의 민주주의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한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기구내에서 각종 民主化 措置에 의해서 국가부문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부문의 독자적 질서유지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영향력확대가 사회질서의 혼란과 富 및 權力의 불평등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 영역에서 자율적인 관리기구의 역할이 증대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단위 및 각 직장단위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에 의해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관리능력이 신장되어야 한다.<sup>8)</sup>

둘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시장개방압력과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의 추격도 노사협의방식의 모색보다는 成長第一主義로 회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노조의 내적 분열은 조직화된 전체로서 노동부문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노조의 분열에는 기업별 노조의 현실, 단위노조에 대한 노총의 영향력 제한, 노

8) 플라차스(N. Poulantzas), 맥퍼슨(C. B. Macpherson), 패트만(C. Pateman) 등은 부 및 권력의 불평등과 간접민주정치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과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87), pp. 254~264 참조.

총의 대표성 결여, 노사분쟁에 대한 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 활동금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자본가집단과 노동단체들이 協商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 경험이 없는 것도 양측간의 협상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자본부문과 노동부문의 타협을 유도하고 협약준수를 보증해야 할 국가에 대한 신뢰감 결여도 계급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노동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협상능력을 인정하고 국가와 노동, 자본이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제를 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남한에서 이러한 組合主義가 실현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는 있으나,<sup>9)</sup> 장기적으로 남한에서 시장경제체제 및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복지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노동간 조합주의적 타협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업은 국가의 직접적 노동통제와 국가의 각종 특혜에 의존하였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생산과 분배과정에 대해 직접적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勞働者들도 단위노조에서 단기적 임금인상만을 목표로 하

9) 이에 관해서는 김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pp. 142~152 참조.

는 극단적 투쟁을 함으로써 물가인상과 실업, 경쟁력저하, 기업도산초래 등을 유발하였던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노동계급 전체의 福祉水準의 向上을 보장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임금정책과 고용, 재정, 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자본과 노동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국제노동분업과 시장경제체제의 현실속에서 자본축적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國家介入과 市場機構의 적절한 배합 및 국가와 노동, 자본간의 협상의 틀이 제도화됨으로써 남한은 복지국가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sup>10)</sup>

한편 남한은 계급갈등해소를 위한 거시적 利益調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조정장치를 고안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갈등은 남한내에서 영호남간의 갈등이 아니라 남북간 지역갈등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일후 독일 및 베트남이 겪고 있는 지역갈등은 분단국가의 통일 이후 계층간 갈등과 지역적 갈등이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으로 「協議主義」(또는 多極共存體制, consociationalism)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종적·종교적·문화적 갈등이 첨예화된 북유럽국가에서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각 집단간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고안된 集團的

10) 임혁백, “선진형 갈등해결 기제의 모색,” 구범모 편,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서울: 고려원, 1992), pp. 294~300.

葛藤解消의 한가지 방안이다. 이것은 다수결 원리에 입각한 승자와 패자의 영원한 고착상태에서 벗어나서 상호 일정한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소수에게 단순한 수적 대표성을 상회하는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타협과 공존의 모델이다. 이러한 協議主義는 체제와해의 위협에 대한 인식, 체제유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 엘리트간 타협적 정치문화의 존재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sup>11)</sup>

남한에서 영호남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 이후 남북지역간 갈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의 배제를 고착화시키는 다수결 원칙보다는 지역간 공존과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協議主義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 지역주의의 갈등현상은 북유럽국에서와 같이 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해결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협의주주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더라도 파급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소수도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權力分占裝置와 소수파의 이익보호를 위한 비토권의 허용, 관직임명 및 자원분배에 있어서 비례주의, 하위집단간의 상호 수용성 증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부분적으로 난관이 존재

11) 협의주의에 대해서는 Arend Lijphart,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 no. 1 (1968), pp. 31~39 참조.

12) 임혁백, "선진형 갈등해결 기제의 모색," pp. 300~303.



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이념과 다원적 정치체제가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북한의 변화

현재까지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舊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북한의 차별성 및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자 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 체론」 및 「우리식 사회주의」와 같은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社會主義圈 崩壞의 여파를 흡수하고 대내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외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첫째, 주체사상은 북한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체제유지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의 변화 및 남북한 실상 등을 舊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북한지도층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귀결된 사회주의권의 개혁경험을 지켜봄으로써 개방바람을 막고 체제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남북분단이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비해서 북한의 변화를 훨씬 힘들게 하고 있다. 즉 북한지도층에게 있어서 개방·개혁의 확대는 곧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理想的 優越性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곧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여건상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관료주의의 병폐, 생산성 저하, 자원분배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북한의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과도한 국방비 투자, 기념비적 건물의 건설, 과시용 대규모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북한의 특수한 요인들도 體制의 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대외경제망의 붕괴는 대외적자와 에너지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경제난해소와 주민생활조건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중간계층들과 젊은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대규모의 체제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한 지도층은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北韓社會에서도 정치학습기피, 노동기피, 근무태만 등

社會的 逸脫行爲들이 증가하고 이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13)</sup> 더욱이 경제난과 사회적 기강해이로 식량약탈, 도박, 암거래, 뇌물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관료들의 부정 및 근무태만, 관료주의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sup> 이처럼 주체사상에 의한 政治學習과 思想統制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방여파로 인하여 이데올로기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통제력 약화현상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방여파로 인하여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체제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설령 주체사상이 개방을 합리화하는 理念的 道具로써 새롭게 재해석되더라도 사회분화의 진전에 따라서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가 커지고 결국 이데올로기의 퇴조현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북한의 최대 딜레마는 체제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부분적 개방·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制限的 開放·改革을 추진할 경우 이념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하는 문

13) 이러한 사회적 이탈행위에 관한 최근의 증언으로는 여만철씨 가족의 언론 인터뷰를 참조할 것. 예컨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1994년 5월 11일자 참조.

14) 國土統一院, 「남북한 사회문화현황 비교」 (서울: 國土統一院, 1981), p. 200.

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적응력 또는 탄력성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경직성과 폐쇄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주체사상은 점진적 개방·개혁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주체사상이 존속하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며 주체사상은 개방 여파를 단속하기 위한 社會統制 役割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 주체사상을 여러가지 상호 모순적이며 상충적 요소의 복합체로 인식할 경우 주체사상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합리화하는 이념적 도구로서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체제의 變化方向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sup>15)</sup> 앞으로 북한 지도층이 체제개방·개혁과 통제의 딜레마를 어떤 형태와 어떤 수순으로 해결하고자 할지에 대해서 전망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층내에서 개혁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한계를 나타낼 것이며, 舊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본격적 개혁·개방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시나리오 중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장기적

---

15)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Future Prospects," *Foreign Affairs*, vol. 70, no. 5(1991), pp. 34~35.

으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사회주의의 개혁모델을 채택하는 것이다.<sup>16)</sup> 물론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개혁과 정치적 통제를 병행하는 중국모델을 채택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북한은 협소한 국토와 인구규모, 남북분단 등을 감안할 때 중국식 모델 조차도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체제불안 요인을 수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체제고수와 제한적 변화 사이의 딜레마에서 결국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북한의 정치체제도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된 형태나마 개방·개혁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개방여파를 단속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이 사상통제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社會分化가 진전됨에 따라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가 커지고 이데올로기 퇴조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주체사상이 제한적 개방·개혁을 수용하는 탄력성을 보일 경우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는 좁혀지겠지만 그러한 주체사상의 실용주의화 경향은 결국 이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북한체제는 비록 훨씬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社會主義改革모델을 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향은 장기적으로 「탈전체주의체제」로부터 점차로 「제한적 다원주의·권위주의체

16)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629~53.

제」를 거쳐서 「다원주의체제」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sup>17)</sup>

1953년 스탈린 사망후 소련과 동구권에서 탈스탈린화(de-Stalinization)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권 전체에 불어 닥친 탈스탈린현상에 대응하여 주체사상과 김일성숭배를 강조함으로써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소련과 동구권에서는 스탈린 사망후 공산주의체제수립 초기의 全體主義體制에서 벗어나서 이데올로기의 비과격화, 정치적 테러의 쇠퇴, 당통제의 합리화, 경제개혁, 정책결정의 다원화 등을 경험하였다.<sup>18)</sup>

북한도 크게 보면 스탈린사망후 사회주의권에서 진행되었던 탈전체주의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체제가 지속될 경우 김일성숭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힘들겠지만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탈김일성화가 시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의 탈김일성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닐 것이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퇴조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즉 주체사상의

17)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15~24.

18) 탈스탈린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모델외에 근대화모델, 관료정치모델, 이익집단모델, 수렴론 등이 제시되었다.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2), pp. 1~35; 한편 탈스탈린화는 시민개혁과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이 있던 동구권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가통제완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영역 확대가 누적되어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념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대내외 정책결정에서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과 각 사안 자체의 독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둘째, 당과 국가기구간의 役割分化가 점차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물리적 강제수단에 의한 사회통제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당과 국가기구는 통제기구로서보다는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動員體制的 性格이 감소될 것이다. 각종 지역 및 기능적 조직을 통한 주민동원이 감소되고 이념적 동기보다 물질적 유인과 주민들의 이익표출 및 자발적 참여가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정책결정구조가 다원화되고 당과 국가기구간의 역할분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구간에 정책결정구조가 수평적으로 다원화될 뿐만 아니라 하위조직과 지방단위로 정책결정구조가 수직적으로 분산될 것이다. 또한 이념엘리트보다 專文官療集團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대중조직과 다른 자발적 사회단체들이 조직되고 다양한 비판세력들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제한된 영역에 한정되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치조직을 결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 탈전체주의화가 진행되어 각 부문별로 점진적 변화가 누적되면 制限的 多元主義體制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중반 이후 자유연대노조(Solidarity)가 조직되었던 폴란

드나 헝가리 등이 제한적 다원주의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에서 정치개혁이 진전될 경우 중국도 제한적 다원주의체제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脫전체주의체제하에서는 권력의 분산과 시민사회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의 공개적 조직화가 불가능하다. 제한적 다원주의체제하에서는 이데올로기와 당의 통제가 지속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다원화가 진전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의 조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制限的 多元主義體制은 반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제한적 다원주의체제에서는 첫째,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표명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통제수단과 정책결정의 우선사항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상징적인 것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대신 사회의 다원화와 가치관의 다양화를 선호하는 民主主義的 思考가 공감대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 당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공산당은 국가 전체의 관리자가 아닌 정치적 조직의 하나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당내 정책 파벌집단의 존재를 용인하게 되고 여러 정책적 파벌집단간의 연합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셋째, 社會部門의 自律性이 증가할 것이다. 각종 사회단체의 결성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간이 확보될 것이



다. 社會團體들은 일차적으로 기본권 확대를 주장하고 점차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나, 정치적 틀내에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 시위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는 전체주의체제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하고 漸進的 民主化를 필연적인 대세로 만들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공산당 이외의 정당결성과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복수후보 입후보와 복수정당제는 공산당의 일원적 통제를 힘들게 할 것이나, 정당체제는 실질적으로 정권교체가 힘든 헤게모닉 정당체계(hegemonic party system)<sup>19)</sup>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국가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민주사회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될 경우 북한은 그 해결방안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화와 다원화가 보다 진전되는 일종의 「狹義權威主義」체제를,<sup>20)</sup> 경제적으로는 분권화와 시장화로 이행되는 혼합

19) 사르토리에 의하면 헤게모닉 정당은 형식적 다당제하에서 실제로 다른 정당의 정권도전을 허용하지 않고 권력을 계속 장악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헤게모닉 정당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폴란드 공산당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닉 정당과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과 같은 실용주의적 헤게모닉 정당으로 분류된다.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230~237.

20) Richard Lowenthal, "On 'Established' Communist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7 (1974), pp. 344~45.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sup>21)</sup> 그러나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기까지는 수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으며 다양한 경로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sup>22)</sup> 북한이 多元主義體制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다원주의체제에서는 주체사상이 완전히 폐기되고 민주주의 이념이 정착될 것이다. 개인적 기본권의 보장과 정치참여가 제도화되며 민주주의 가치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권력독점과 인권침해, 관료들의 부패, 정치적 테러 및 부패 등에 대한 청산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둘째, 多黨制가 형성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산당은 소수정당 혹은 명목상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대신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중심으로 정당이 결성되어 경쟁적 정당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중도개혁 정당과 급진 개혁정당

21) 공산주의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이행단계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로는 Tsuyoshi Hasegawa, "The Connec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in Communist Regimes," in Gilbert Rozman, ed., *Dismantling Communism: Common Causes and Regional Varia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pp. 59~117 참조.

22)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는 유형에는 점진적·단선적 유형, 순환유형, 변증법적 유형 등이 있다. Samuel P.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99, no. 2 (Summer 1984), pp. 209~218.

을 중심으로 정치적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셋째, 중간계층들이 성장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社會團體의 役割이 증가할 것이다. 중간계층의 정치적 성향이 정권교체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특히 신중간계층은 정치적 민주화를 지지하는 중요한 사회세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단위와 직장단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民主主義의 土着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사회통제와 감시제도, 주체사상의 역할, 외부세계로부터의 단절, 사회적 이동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단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산업화의 진전과 외부로부터의 개방여파, 사회구조의 분화 등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도 여러가지 유형의 사회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사회분화, 도시화, 교육의 확대, 젊은 세대의 증가 등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 단층분화가 발생하여 농민이 1946년 74.1%에서 1987년 현재 25.3%로 감소한 반면, 농민자는 1946년 12.5%에서 1987년 57.0%로 증가하였으며, 기술자·전문가·사무직 등 신중간계급은 1946년 말 6.2%에서 1987년에 1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계층분화현상은 다원화현상을 수반하여 특히 신중간계급의 實用主義的 性向은 북한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도시화로 인하여 1987년 현재 북한 인구의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 인구는 전체 도시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획일적 통제를 힘들게 수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 敎育機會의 擴大로 1987년 말 현재 대학이 244개이며,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이 49만 4천명이고, 1990년 현재 대졸자가 약 146만명이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주의적 및 자유주의적 사고가 증가하고 기대수준이 상승하며 외부세계와 북한을 비교하는 의식도 늘어날 것이다.

넷째, 1987년 현재 북한인구중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가 전체 인구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혁명후기 세대들은 당성과 개혁성이 부족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체제비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23)</sup>

이와 같이 북한에서 사회분화, 도시화, 교육확대, 신세대증가 등의 요인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북한에서도 계층간·세대간·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북한사회에서도 制限的 多元化와 實用主義的 思考의 확산으로 사회불안요인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점차 중요하게 표출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23)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91~408.

이데올로기와 각종 조직적 방법을 통한 社會統制方式에 입각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더라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회부문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틀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3.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 사회 전망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초기의 그것이 반드시 '통합'(integr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한의 지역적 편차가 여전히 잔존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이념 및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남북한은 異質性을 극복하고 공통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이념과 다원적 정치체제가 제도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김일성 사망후 脫 전체주의화와 제한적 다원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가 단일경로를 따라서 단선적이며 누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정치적 변화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단절적이고 진전 및 후퇴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북한도 궁극적으

로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社會의 自律性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그 경로에 대한 분명한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의 상호 수용성이 증가하더라도 남북한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舊소련 및 동구권이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서구의 민주주의체제에 비해서 상당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민주주의체제의 정착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며 앞으로 민주주의 제도화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제한적 다원주의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의 정치체제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政治理念면에서 볼 때 남한지역에서는 민주주의이념이 정착되어 정치과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집단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적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는 주체사상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점차 다원적 수치가 중요해지겠지만 민주주의이념이 주민 개개인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政治體制면에서 보면 남한지역에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질서가 제도화될 것이다. 정치적 경쟁구조의 다원화와 함께 지역단위 및 직장단위에서도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 반면 북한

지역에서는 제한적 다원주의체제하에서 정치적 경쟁이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함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존재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과 실질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多元主義體制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국가부문의 기득권계층과 시민사회간의 힘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사회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한지역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이 완화되고 각 부문간의 갈등이 조절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각종 政治·社會的 葛藤이 제도적 틀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정치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념과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남북한간 상호 수용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지역이 선진산업민주사회로 이행하는 반면 북한지역은 상당기간동안 制限的 多元主義 段階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다원주의체제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개방·개혁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제한적 민주주의체제가 다시 보수주의체제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정치적 참여의 확대, 사회단체의 자율성 확대 등을 요구함으로써 社會勢力들의 影響力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第IV章 統一韓國社會의 葛藤構造와 樣態

모든 사회에는 정도와 범위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이념, 종교, 인종, 지역, 계층, 성별, 세대, 부의 배분 등의 제반 측면에서 政治·社會的 葛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현재의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의 잠재적 또는 현시적 의사표출을 의미하며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sup>1)</sup>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는 전쟁이며 안정된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 사회내에서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표출되는 樣相은 각 나라의 정치이념 및 제도의 형성 정도,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상호관계, 경제발전 수준, 사회적 동원<sup>2)</sup>의 양상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각 사회는 자체에 고유한 갈등의 기본적인 파라미터(parameter)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분단국가가 통일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갈등구조와 양태는 통일 방식, 분단시기의 변화된 상태, 주변 환경 등 통일이 되었을 당시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體制能力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다.

1)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1992), pp. 106~65.

2) 여기에서 사회적 동원이란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이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사회분화와 이동의 증대를 비롯하여 기대감·욕구 등의 심리적 변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Karl W. Deutsch,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 3 (September 1961), p. 493.



즉 통일한국의 갈등구조와 양태는 통일 방식, 새로운 환경의 영향과 통일 이전까지의 남북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반 여건의 複合的인 産物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갈등구조와 양태는 통일국가 가 선택한 이념체제, 정치·경제제도 및 사회체제 등에 따라서 형성될 것이며,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 통일 이전 남북한지역에서의 葛藤構造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3)</sup>

이와 함께 통일은 북한주민들에게는 물론 남한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양상의 현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개인, 집단 및 계층별로 다를 것이고 또한 그 파급 효과도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은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새 사회를 구축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불만과 좌절을 표출하고 있다. 經濟的 側面에서는 동서독 지역주민간 생활수준의 격차,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 불충족, 실업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 심리적으로는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 부족, 새로운 가치 체계에 대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지위의 저하 등이 갈등을 야

3) 예를 들어 박광주는 통일한국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민족자주와 관련한 갈등, 민주화의 갈등, 그리고 남북지역간의 갈등을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박광주,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pp. 42~49.

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up>4)</sup>

결국 통일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양태는 기존의 질서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새로운 질서의 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 중첩적·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한 현실에서 조망해 볼 때, 統一過程은 남한이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무리없이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사회의 정치적 안정,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국민적 콘센서스에 기반한 사회 내부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葛藤構造에 대한 분석은 제반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갈등을 완화·해소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 1. 지속적인 갈등양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남한사회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발전, 문화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원주의 질서가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과 같은 남한사회의 構造的 葛藤要因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sup>5)</sup> 또한 남한의 시민

4) *Die Zeit*지 여론조사 결과 (1993. 10.1) 및 제2장 제2절 참조

5)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표출형태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석준, “의회민주주의 제도화와 국가능력 - 사회갈등, 체제·반체제세력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각종의 이해집단이 자율성과 다원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배증할 것이므로 갈등현상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sup>6)</sup>

북한사회에서는 공산체제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갈등<sup>7)</sup> 이외에 體制變化過程에서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의 증대와 같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산업화가 진전되고 다원화현상이 점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남한의 산업화 및 근대화과정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상으로 대두될 것이다.

한편, 통일 이전 民族共同體的 統一過程이 진행되어 남북한간에 상당한 정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 체제개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갈등이나 남북한지역의 발전과정의 차이에 따른 분단 이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up>8)</sup>

---

및 여야정당의 이익표출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1990), pp. 259~274 참조.

6) 김성국, “21세기의 사회문화,” 21세기위원회, 「21세기 한국의 전망과 과제: 제4차 전체세미나」, (1989. 12. 4), p. 24.

7) 1990년대에 들어 여러 채널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폭동과 식량약탈사건, 반김정일 풍조의 확산, 체제비판사조 등은 당장 북한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나 잠재적인 폭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갈등이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417~432.

8) 물론 통일은 분단 이후 남북한 대치상황 아래서의 체제간 갈등은 해결해준다.

## 가. 남한지역에서의 갈등양태

### (1) 지역갈등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양태 중에서 우선 地域葛藤을 지적할 수 있다.<sup>9)</sup> 지역갈등은 남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어온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다. 심지어 지역갈등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선진사회로의 도약에 있어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sup>10)</sup> 지역갈등의 핵심적 내용은 영남과 호남간의 갈등이다.<sup>11)</sup> 지역갈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심리적 감정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민주적 발전에 構造的 障礙要因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sup>12)</sup>

9)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7.6%가 통일 이후 '지역격차'가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49.4%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함으로써 '지역격차'가 통일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96~98.

10) 유석춘·심재범, "한국사회의 사회갈등과 변혁운동," 「현대사회」, 가을·겨울호 (1989), p. 37. 제14대 국회에서는 지역감정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11) 예컨대 한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1989년 실시한 전국규모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남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96.3%가 남한의 지역갈등 문제를 영·호남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최협, "국민화합과 지역갈등: 지역갈등해소방안을 위한 연구", 21세기위원회 편, 「민족화합의 방향 모색」 (1990. 8), p. 262 재인용.

12) 이러한 구조는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경상도

따라서 남한내에서 지역갈등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내에서의 지역갈등과 남북한간의 지역갈등이 증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地域葛藤이 통일의 후유증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선진민주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지역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후 독일 및 베트남에서 나타난 地域葛藤은 분단국가의 통일 이후 계층간 갈등과 지역간 갈등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3)</sup> 특히 최근에 발생한 남북 예멘간의 무력분쟁은 지역간 갈등이 통일국가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통일 이전부터 巨視的 利益調整 메카니즘을 만들어 지역갈등을 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조정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유권자들의 72.9%가 자기 지역 출신인사가 총재로 있는 민정당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양당이 경상도 지역에 할당된 66석의 국회의원 의석의 95.3%에 해당하는 63석을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에서는 평민당에게 69.0%의 지지를 보냄으로써 이 지역 37석의 97.2%에 해당하는 36석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충청지역 주민들도 이 지역에 연고를 둔 공화당 후보에게 60.8%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치사상 유래없는 4개의 지역정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13) 베트남의 경우에 대해서는 김도태, 「베트남 통합사례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8~144 참조.

## (2) 계층갈등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에서 남한사회에서는 전통적 계층(계급)구분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계층구분이 등장하였다.<sup>14)</sup> 그러나 남한사회에서의 계층간 갈등은 階層의 構造化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는 불평등의 양태가 심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5)</sup> 즉 중상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노동계층, 도시빈민계층, 농민계층 등 여러 계층간의 社會的 移動性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sup>16)</sup>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의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남한사회의 불평등 인식을 강화시켜온 것이다.

따라서 남한사회 전체의 富가 실제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만족감보다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빈곤감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 예컨대 부의 불평등,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의 비정상적인 자본축적, 토지·주식·아파트 투기

14) 엄격한 의미에서 계층과 계급은 분리되나 여기에서는 두 개념을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한다.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계급구분에 대해서는 서관모, “현대한국사회의 계급구성,” 『한국사회학연구』 제7집 (1984) 참조.

15)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현대문학, 1991), pp. 79~108.

16) 최근 수년 동안에 발표된 몇몇 언론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인 차원에서 중간층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80% 정도, 상층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세대보다 자식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 이상으로 남한사회에서는 여전히 신분상승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및 블로소득자의 비정상적인 증대, 소득지출의 불평등 등<sup>17)</sup>이 계층간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남한사회에서 과소비풍조 만연, 소비지향적·쾌락주의적 가치관의 양산, 노동윤리의 상실과 같은 가치관의 혼란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더욱이 남한사회에서의 不平等 認識은 계층간의 거리감이 실제 거리보다 더 크고, 계층간 분리감이 실제적 분리보다 더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sup>19)</sup>

특히 남한사회에서는 오랜기간 동안의 국가주도 산업화전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법적,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력으로 계급갈등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력이 완화된 상황에서 勞動階層의 不滿이 폭발적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마찬가지로 도시빈민층이나 농민계층과 같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국가와 자본, 노동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빈곤정책, 농촌정책 등의 집행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 經濟成長과 分配問題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정우,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진단과 처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서울: 역사비평사, 1992), pp. 21~57.

18) 구범모, "한국산업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산업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의 제문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 9~10.

19)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p. 105.

이러한 계층간의 갈등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통일 이후 새로운 國民形成 過程에서 계층간 이익대표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때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적 제도화와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으로 계층간의 갈등은 완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갈등은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남한에서 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 노동간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계층의 이익 대변 및 계층간 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利益代表體系의 형성이 필요하며,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 발전된 사회조합주의적 타협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세대갈등

남한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일관성과 권위가 흔들리고,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世代間 葛藤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세대간 갈등은 대체로



산업화 이전 세대, 산업화주도 세대, 그리고 산업화 이후 세대 간의 인식과 행태에서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세대간 갈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歴史的 經驗의 不連續性이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간에는 이념적 지향과 사회적 성격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첫째, 이념적 지향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반면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여러가지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전쟁 非경험세대 중에서도 보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념적 진보성 및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sup>21)</sup> 한국사회도 이미 이념적 좌우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sup>22)</sup>

둘째, 사회적 성격에서 한국전쟁 경험세대가 절대빈곤에서 해방된 현상태의 주역임을 자부하고 相對的 滿足感을 갖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전쟁 비경험세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풍

20) 송복,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pp. 191~192.

21) 한 여론조사의 국가보안법 존폐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20대의 13.32%, 30대의 10.62%, 40대의 7.97%가 완전폐지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이러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20.

22) 위의 책, p. 184.

요로운 데 대한 불만감과 박탈감을 훨씬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세대차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20~30대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不信의 정도가 낮은 데 반하여,<sup>23)</sup>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년층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4)</sup> 일반적으로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구세대로 이행된 세대는 감상적인 통일론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으며, 산업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신세대는 통일을 實利的인 次元의 문제로 보지만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양상은 통일과정에서 통합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통합의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X세대'의 등장으로 상징되고 있는 남한사회내의 급격한 世代變化의 속도와 폭은 통일시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혜택보다는 통일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23)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1993), p. 136.

24) '통일비용의 부담이 있더라도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것이 좋은가'하는 질문에 대해 50대 이상의 30%가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데 반하여, 20~40대는 약20% 정도만이 적극적 찬성의 반응을 보였다.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p. 84.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25)</sup>

향후 한국의 市民社會가 더욱 자율적이며 다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특히 노년층의 증가와 청소년층의 급격한 분산화로 통일 이후 세대간 갈등이 현재보다도 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독일의 예로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의 전후 세대는 再社會化過程을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적인 사고와 행동패턴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 후 同質化過程에 어려움을 조성할 수도 있다.<sup>26)</sup> 또한 중장년층 세대들은 기존의 사고와 행동패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 나. 북한지역에서의 갈등양태

북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의 이념적 경직성, 엄격한 사회통제와 감시제도, 외부세계로부터의 단절, 사회적 유동성의 제한

25) 예컨대 통일 이후 '실업문제'의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55% 정도가 다소 악화 또는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데 반하여, 50대와 60세 이상은 42% 정도만이 다소 악화 또는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p. 97.

26) 동서독 청년세대간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Heinrich August Winkler,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 120~22 참조.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상징한다면 사회분화, 도시화, 교육의 확대, 신중단계급의 성장, 젊은 세대의 증가 등이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政治·社會的 葛藤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식량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빈곤, 관료제의 부정·부패 만연 등 사회적 불만과 갈등야기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sup>27)</sup>

첫째,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 계층분화가 발생하여 농민계층이 감소한 반면, 노동자계층과 기술자·전문가·사무직 등 新中間階級이 증가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계층분화현상은 사회의 다원화현상을 수반하며 특히 신중단계급의 실용주의적 성향은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사회의 도시화 진전으로 인하여 1987년 현재 북한 인구의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sup>29)</sup> 도시화는 획일적 통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社會的 流動性을 증대시키고 주택, 교통, 직업, 주거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수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인이 된다.

셋째, 교육기회의 확대로 1993년 10월 현재 종합대학 1개를

27)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pp. 391~408.

28) 농민이 1946년 74.1%에서 1987년 현재 25.3%로 감소한 데 반하여 같은 기간동안 노동자계층은 12.5%에서 57.0%로, 신중단계급은 6.2%에서 17%로 증가하였다.

29) 특히 평양 인구는 전체 도시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포함 290개의 각종 대학이 있으며,<sup>30)</sup> 1990년 현재 대졸자가 약 146만명이다. 북한의 教育目標가 소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창출에 있다고 하지만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주의적 및 자유주의적 사고가 증가하고,<sup>31)</sup> 기대수준의 상승 및 외부세계와 북한을 비교하는 의식도 늘어날 것이다.

넷째, 1991년 현재 북한인구중 1946년 이후에 태어난 분단 이후 세대가 83.2%이고 1954년 이후에 태어난 전후세대가 74.8%를 차지하고 있다.<sup>32)</sup> 이들 혁명후기 세대들로부터 표출될 수 있는 갈등의 원천은 政治的 順應의 변화여부이다. 비록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북한의 젊은 세대도 당성과 혁명성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체제비판적인 성향이 점차로 증대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화과정에 수반되는 현상들은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 공업화’를 진전시킨다면 더욱 현실적인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반 영역에서 私的 自律化가 증대될수록 개인적 이기주의, 물질주의 및 배금주의, 그리고 뇌물·절취와 같은 ‘타락’

30)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조감: 북한 상식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4), p. 41.

31) 더욱이 북한주민들은 체제순종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면에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선호가 존재하는 이중적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32)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조감: 북한 상식집」, p. 15.

현상이 더욱 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sup>33)</sup>

한편 북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간에 현격한 생활격차로 인하여 지역감정이 존재하며, 또한 평안도와 함경도간의 地域葛藤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이에 수반될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다원화 현상의 확대와 실용주의 사고의 확산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증대할 것이며, 제반 갈등현상은 이념적 갈등은 물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새로운 갈등구조 및 양태

### 가. 정치적 차원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自由民主主義體制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정치가 달라지는 점은 남한의 성숙된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합쳐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제도 운영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33)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두 개의 이질적 체제에서 살아온 이질적 집단이 하나로 합쳐지는 점이며, 둘째는 두 개의 이질적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사회가 부분적으로 자유화, 다원화, 민주화의 과정을 이행함에 따라 남북한간 體制相應性이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쌍방 체제간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와 체제의 기능수행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간격은 쉽게 해소될 수가 없다. 새로운 정치체제 아래서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될 것인 바, 이들은 정치적 불만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독, 구소련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예로 비추어 볼 때, 통일 이전 북한사회에서 특권계층(노멘클라투라)으로 각종 혜택을 독점하고 있던 계층이 統一韓國에서도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은 북한지역 국민들이 남한지역 국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활태도와 생활방식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政治理念에서는 물론 이질적 체제 속에서의 삶으로 부터 파생된 사고와 가치관의 심각한 괴리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념의 갈등은 통일한국사회가 다원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진보적 이념의 활동공간 확대에 따

른 이념적 갈등이 등장할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후 舊체제의 청산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구체제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북한지역 사람들이나 집단, 그리고 남한내의 사람들이 統一政府에 대해 과거 청산의 맥락에서 과거체제 아래서의 가해집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 나. 경제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의 갈등에서는 우선 북한경제구조의 資本主義體制로의 전면적인 개편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일후 북한지역의 재산소유 및 처리방식 등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분배문제는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소유주가 소유권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경작자들이 소유권의 인정을 요구할 경우 등 集團的 葛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기득권층과 이에 대한 도전층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 혜택을 누리고 있던 계층이 경제적 박탈을 경험할 때 새로운 체제불만집단으로 변모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통일후 남북한간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경제체제 및 구조가 조정될 것인 바, 이 과정에서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계급갈등을 조성하는 집단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이 기존의 소외집단과 연계되어 광범위한 불만세력을 형성할 경우 階級葛藤이 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로 북한지역 국민들은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급격한 기대 상승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편 통일후 經濟再編過程에서 남한지역의 기득권층이 경제적 불이익 내지는 손실을 강요당할 경우 이들은 신정부에 대하여 정치·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될 수도 있다.

#### 다. 사회·문화적 차원

통일이 되기까지 남한지역에는 정도가 완화될 수는 있으나, 지역갈등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북한지역에서는 産業化過程에서 급격한 도시화, 지가상승, 주택난 등 심대한 지역격차를 유발하는 문제가 점증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갈등은 통일한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러한 남북한 지역내에서의 지역감정에 증첩되어 남북한간의 地域葛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지역간의 갈등은 남북한 지역내에서의 지역갈등 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후의 국민통합에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은 결국 지역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남북한간에 중심-주변의 모델 설정을 가능케 하는데, 남북한간 경제적 수준차이를 고려할 때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sup>34)</sup> 특히 남북한간 지역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지역간의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國民正體性의 구축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나타날 권력게임, 즉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5)</sup>

통일 이후의 사회는 분명히 과도기적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과도기적 현상으로 가치관의 혼란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분단 이전 교류와 협력의 경험은 통일독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체제 전체의 통합성에 그렇게 기여하지

34) 강명구, “통일한국의 지역 격차 문제: 공존의 지역정책을 위한 제언,”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질서와 이념의 모색』 (1993), pp. 241.

35) 박광주,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pp. 47~49.

못할 수도 있다.<sup>36)</sup> 그것은 두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정치·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統一韓國이라는 새로운 정치구조에 다르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노출로 심리적 동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심리적 동요가 북한지역 주민들의 낮은 생활수준, 대량 실직 등의 요인과 복합되어 북한 주민들을 '2等市民'으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남한 지역의 주민들이 북한지역 주민들을 상대적으로 멸시할 경우 남북한간의 지역적 갈등과 증첩되어 통일후 내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신·구세대간의 갈등양상과는 달리 통일독일의 스킨헤드와 같이 극단주의적 의사표출을 하는 집단의 등장 등 新體制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세대의 집단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북한지역에서는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층의 집단적 갈등 및 청소년 범죄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성윤리의 혼란과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주민들은 전혀 상반되는 이념 아래서 社會化되었다. 남한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두는 자유주의와 개인주

36) 통일독일에서의 지역간 갈등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 214~18 참조.

의 그리고 가치의 다원화현상을 긍정하는 태도와 상이한 입장에 대한 관용 등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사회에서는 교조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가치 획일화 현상을 긍정하는 태도와 상이한 입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남한사회의 아노미적 個人主義와 북한사회의 맹목적 集團主義는 남북의 의식구조와 삶을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 가치관이 방치된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통일은 오히려 더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sup>37)</sup> 예컨대 북한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물질적 결핍감이 남한의 물질주의와 결합되면, 物質萬能主義를 낳을 수도 있다.<sup>38)</sup>

문화적 차원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철저하게 상이한 사회화 과정에 따라 고착된 생활문화(의식구조, 가치관, 행동양식, 습관 등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남북한간의 이질화 양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북한주민들의 열등감 및 모멸감 등에 따른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개인적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 남북한지역 주민간에 상당한 정도의 心理的 乖離感이 나타날 것이다.

37) 전병재, “사회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 남북한 인성 차이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4), pp. 30~32.

38)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1994. 5), pp. 187.

특히 주체사상의 組織的 政治敎化過程에 의해 형성된 교조적 이데올로기의 신념체계 붕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체계의 혼란 또는 아노미현상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으며 사회활동에서 남녀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일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성적 가치관에 대한 차이로 인한 女性問題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 여성의 근로조건, 탁아정책, 가족정책 등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녀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sup>39)</sup>

39)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6~37.

## 第V章 國民統合方案: 갈등해소의 맥락에서

우리가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심화시키는 漸進的·段階的 統一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한간의 이질성에 따른 간격을 가능한 사전에 극복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데 있다. 더욱이 북한체제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체제의 단절적 전환에 의한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政治的·制度的 統一을 이룩하였다고 해서 남북한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통합의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제도적 통일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통합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질화된 두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주민들간에 의식과 사고방식이 통합되고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다.<sup>1)</sup>

결국 南北韓 國民統合이란, 분단상태가 종식된 후 남북한지역의 '양쪽 체제가 상호의존적인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지역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sup>2)</sup>를 만드는

1) 성경룡,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1993), p. 265.

2)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1994. 5), pp. 182~83.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비로소 통일한국의 구성원 상호간에 사회적·심리적 거리감이 없어질 것이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민족의 대단합”<sup>3)</sup>을 이룰 수 있으며, 바로 民族正體性(national identity)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 1. 기본방향

통일한국에서 법, 제도 등의 제반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과정, 생활규범 및 가치체계 등의 차원에서도 동질적인 규범과 절차를 남북한주민이 공유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어 새로운 國民形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함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갈등은 조화나 통일과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과 통합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하여 변전된다. 따라서 사회의 각 구성요소는 전체의 새로운 질서와 통합을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배태하는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統一韓國에서의 제반 정치·사회

3) 위의 책.

4)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p. 53.

적 갈등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반 갈등의 해소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지역간에 이념적·정치적 이질성이 여전히 상존할 것이므로 同質性回復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국민은 서로 다른 제도 아래서 반세기 이상 살아오면서 상이한 언어, 문화, 역사를 형성해왔다. 분명히 남북한 국민은 같은 민족이지만 강한 '우리 의식'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결국 통일 이후 새로운 國民形成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이질성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 또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민족 동질성의 구축은 통일과정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후에도 남북한주민들의 통합은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서의 동질성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둘째,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 국민간의 同質性 確保는 경제적 여건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이는 새로운 이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수용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정치·사회적 통합의 경제적인 토대를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문제 해결과 같은 최저

5) 이우영, "통일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이후 유증 극복방안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388~89.



생활의 보장 이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함으로써 특히 북한 지역 국민들의 욕구나 기대의 좌절에 따른 갈등의 분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 형성된 ‘하나의 민족’은 단순히 한민족의 재결합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통일 이후 과거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國民形成 作業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과 평양에 거주하는 국민간에 심리적·정치적·지리적 괴리감이 상존해서는 국민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지역 출신 국민들간에 감정이입능력과 관점채택능력을 성숙시킴으로써<sup>6)</sup> 통일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新정치문화의 창조가 추진되어야 한다.

## 2. 갈등해소 방안

### 가. 정치적 차원

통일한국에서의 정치적 갈등구조의 해소는 권력배분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權力配分問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통일후 어떠한 통치구조를 선택하는가,

6) 문용린,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형성방안 모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 사회과학 학술토론회 논문집, 1993. 10. 28), p. 115.

둘째,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함으로써 타협과 협상의 정치구조를 정착시키는가, 셋째,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이 先進 自由民主主義體制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이익이 합당하게 반영되는 결과로서 정책이 시행되는 정치체제가 형성·운영되어야 한다.<sup>7)</sup>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상정할 수 있다. 內閣責任制는 통일후 각분야의 다양한 정치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적 협상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는 다양한 협상과정을 필요로 하고 정치불안요인을 내포함에 따라 강력한 리더쉽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통일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독일과 예멘의 경우 통일후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한 것을 감안할 때,<sup>8)</sup> 통일 이후 많은 정치세력들이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이 조성될 가

7)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88~92.

8) 동독의 경우 1990년 3월 18일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24개의 정당이 참여하였으며, 1990년 12월 2일 실시된 통일독일의 총선거에서는 40개의 정당 및 정치단체가 참여하였다. 통일대비정책연수단,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서울: 통일원, 1993), pp. 108~114; 예멘의 경우에는 1990년 5월 22일 통합선언 이후 35개월의 과도기간동안 각각 남북예멘의 여당이었던 「예멘사회당」과 「국민의회」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정당이 난립하였다. 통일원, 「예멘통일과정과 부문별 통합실태」(서울: 통일원, 1991), p. 20.

능성이 있다. 또한 남북한에서 議院內閣制가 제대로 실시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내각책임제가 통일후 상황에서 쉽게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sup>9)</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후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大統領制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순수한 대통령제에 입각하여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따른 평화적 통일을 상정한다면 북한지역의 대표성을 가능한 한 보장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지역출신으로 선출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통일후 남북한간 인구격차로 인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그리고 대통령제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으로의 權限集中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권력분립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국회산하에 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9) 변해철, “남북한 통합과 통치구조문제,” (한국공법학회 주최 제29회 학술발표회 논문, 1992. 7. 4), pp. 47~48.

10) 아직 현실정치적으로 그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갈등의 근원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르지만 새로운 남아프리카의 권력배분제도는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구상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멘의 경우에서 처럼 권력배분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통일이 저해될 수도 있으나, 통일을 대비한 국내정치적 기반이 확립될 경우 예멘의 경우를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

둘째, 통일후 정치적 갈등의 완화는 물론 지역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후 국회는 지역대표성을 갖는 상원과 인구대표성을 갖는 하원의 兩院制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지역 간 인구차이를 고려할 때,<sup>11)</sup>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은 북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엘리트 층원제도가 구축·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엘리트층원구조의 왜곡은 남한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sup>12)</sup> 북한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왔다.<sup>13)</sup> 통일 이후에도 엘리트층원의 合理的 構造가 형성·시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통일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 
- 11) 1990년 현재 남한 인구는 42,869,000명, 북한 인구는 21,720,000명으로 남한의 인구규모가 북한에 비해 2배이다.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서울: 통일원, 1991), p. 16.
- 12) 남한의 권력 엘리트 층원상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는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 쟁점과 과제」(서울: 법문사, 1993), pp. 153~76 참조.
- 13) 1946~1990 기간 동안 북한권력의 핵은 단지 25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오직 김일성만이 권력의 핵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당·정·군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양성철, “북한권력지배층 연구, 1946~1990: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 성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1990), pp. 375~76; 전현준·안인혜·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81~85.

을 위해 分權的 國家運營方式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분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sup>14)</sup> 즉 광역행정체계의 도입으로 중앙집중화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혼란을 줄이고 지역단위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통일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의 파급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特殊行政區域方案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5)</sup>

정치적 갈등해소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의 구체제의 유산 처리, 즉 과거청산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구체제에서의 핵심적인 권력엘리트와 군인, 경찰, 당원,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등 국가보안기구 근무자 등에 대한 처리는 舊체제하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와 함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는 문제이다.<sup>16)</sup> 구체제의 유산에 대

14) 이달곤, “국가운영체제: 권력분산, 지방자치 확대로 통일후를 대비,”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서울: 동아일보사, 1993), pp. 214~47.

15)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특별행정구역(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으로 지정, 중국의 주권하에서 두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원용하여 통일후 북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행정구역의 개념으로써 통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행정구역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는 FBIS-CHI-92-062-S, Daily Report Supplement, *China: Macao Draft Basic Law* (31 March 1992) 참조.

16) 통일독일에서의 과거청산과정에 대해서는 통일원, 「통독2주년 보고서」(1992. 10), pp. 16~21와 통일대비정책연수단,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서울: 통일원, 1993), pp. 51~60 참조.

한 처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서 일제식민지 유산의 미처리에 따라 발생한 갈등보다 훨씬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편, 남북한지역주민들간의 이념 및 가치관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思想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의 붕괴가 반드시 사회주의적 사고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개인주의적 사고와 더불어 平等主義的 思考의 확산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지역 주민들은 구체제의 이념과 가치관으로부터 쉽게 탈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의 강요보다는 특히 평등과 그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의 가치는 통일후 내적 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理念的 側面과 관련하여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이념적 지표로서 자유민주주의 및 다원주의사회의 부정적 측면으로 제기될 수 있는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 및 경쟁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념모형을 제시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 이후 동질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주의, 호혜주의 및 관용주의를 한국적 특수성에 부응하는 이념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즉

17) 성경룡,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p. 267.

18) 송복, “21세기 선진한국의 미래상,”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제1차 세미나 발표논문, 1994. 10. 28~29), pp. 7~12.

共同體主義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상규와 상조의 생활원리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적용함으로써 통일후의 심리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혜주의는 남북한지역간의 동반자적 발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용주의는 남북한주민들간에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가치들은 물론 남북한지역간 또는 남북한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일한국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價値들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경제적 차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통합의 촉진수단은 국가전체로서 부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발전과 북한지역 주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즉 집합적인 측면에서 남북한간 지역격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폐통합 등 남북경제통합이 완료되어 북한지역의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에 입각한 대규모 투자와 실업구제책 등이 시행됨으로써 북한지역 주

민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9)</sup>

북한지역의 경제력 회복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南北韓의 經濟統合은 남북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세, 금융, 재정, 화폐 등의 분야에서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독의 경제력 및 화폐가치를 무시한 동서독의 1:1 화폐통합의 후유증을 감안하여 화폐통합은 북한 지역의 경제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적정수준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貨幣統合이 실패하는 경우 인플레이 현상의 발생으로 경제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화폐통합의 비율은 북한지역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하여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0)</sup>

또한 북한지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토지 및 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에서 기업가 및 중산층의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土地 및 企業의 私有化는 독일과 같이 원소유자에 대한 상환원칙보다는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지의 경우 협동농장을 소속 농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분할

19)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85~88).

20)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02.



분배하거나 농민들의 공동투자에 의한 協業農 方式을 고려할 수 있다. 농지분배는 유상으로 하되 대금상환은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국영기업의 경우 주식을 공개하고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정지분을 주식형태로 배분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민영화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經營構造改善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합에 따른 북한지역 기업의 도산으로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상당수가 남한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 및 갈등의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북한인구의 급격한 이동은 남한지역의 임금인하와 북한지역의 노동력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남북한지역간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일정수준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 북한지역 노동력의 이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구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經濟再建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북한지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소 및 직업소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문제의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영인, 금융인, 고급기술자 등 중간 경영관리층을 육성하

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 經濟開發計劃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지역 주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남북한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투자계획과 함께 민간기업의 투자와 해외자본 및 국제금융기관의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는 초기 노동시장의 원만한 관리와 적절한 통화통합이 제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과도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남북한 상품교류와 勞動市場의 제한적 통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 다. 사회·문화적 차원

통일후 내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社會·文化的 次元에서 남북한주민간의 심리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문제가 될 것임을 독일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에서는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 및 가치관의 혼란과 남북한지역간의 갈등상황이 우려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지역 국민들도 통일 이후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정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지역 국민들에 대한 반감이나

떨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을 위한 근간은 바로 북한지역에 시민사회가 발전되므로써 남북한지역이 동질적인 市民社會로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으로서는 민간단체들을 통한 남북한 통합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민간단체차원에서 남북한간 공동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북한지역주민들이 통일 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학술단체, 종교단체, 학교, 연구기관, 체육단체, 예술단체 등의 單一化作業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사회·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설립, 종교단체 설립,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21)</sup> 특히 북한지역에 자발적인 사회·문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북한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통일후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지역 주민들의 心理的葛藤과 疎外感은 어떠한 갈등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엘리트 계층은 사회적 신분격하를 겪게 될 것이다.<sup>22)</sup> 뿐만 아니라 남

21)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50~55.

22) 서재진, 「통일한국의 계급문제」,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pp. 134~35.

한지역 국민들도 통일 이후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정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 사회·심리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價値統合敎育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재사회화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오랜기간 동안 집단주의, 조직사회, 계획사회의 성격을 갖는 사회구조 아래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개인주의, 비조직사회, 자유방임주의사회의 성격을 갖는 남한식의 체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再社會化敎育의 초점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다원주의 가치관, 시장경제체제의 원리 등 통일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통독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새로운 국민형성의 기초작업으로서 활용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재사회화교육 또는 政治敎育은 북한사회주의체제 아래서 지배계층이었던 집단과 피지배계층이었던 일반 주민에 대한 시민교육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지역의 전직 공직자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직 당원, 군인, 경찰,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등 국가보안기구 근무자 등 체제유지 계층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교육이 필요할

23) Heinrich August Winkler,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 107~127.

것이다. 북한체제를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북한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職業教育을 병행하는 한편, 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거친 후 재임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공직자에 대한 재교육은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사회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실시하되, 공무원 재임용대상자에 대한 재교육은 법치행정과 능률적인 행정체계구축을 위한 실무지식 교습을 위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市民教育은 북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다원주의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의식속에 잠재된 노동당 지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점차로 극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의 생활영역내에서 주체사상의 잔재를 제거하고,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며,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脫정치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 의회민주주의 절차, 선거 등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북한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 차원에서 정치참여

의 경험을 쌓고 지역적 관심사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와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지역 국민들이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고 市場經濟秩序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행태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후견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피동적인 정치문화로부터 탈피시켜 새로운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체제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갈등 속에서 상호 이해를 표출하고 의견의 조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民主的 論爭文化'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sup>24)</sup> 특히 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성된 다원적 정당구조에 익숙해지고, 정치제도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은 북한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남한지역 국민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남한지역 국민들은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후유증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지역 국민들에 대해서는 통일로 인한 經濟的 負擔을 분담하도록 하고 통일로 인해 후유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잠재력과 국제적 위상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전망」 (서울: 나남, 1992), pp. 314~15.

이외에도 남한지역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성숙한 民主市民으로서의 시민교육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第VI章 結論: 통일 이후를 위한 우리의 과제

실제적인 정확성과 이론적 정당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회과학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는 수집된 정보와 제한적인 이론적 도구를 가지고 단지 未來의 方向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할 수 있을 뿐이다.<sup>1)</sup> 다만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統一國家의 未來像은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상향일 뿐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실현가능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통일된 한국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적인 사회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통일국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남한체제의 발전된 형태로서 통일국가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는 북한사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남한지역의 국민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質的인 變貌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지역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

1) David O. Wilkinson, *Comparative Foreign Relations: Framework and Methods* (Belmont: Dicken Publishing Company, 1969), pp. 154~74.



로 통일한국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양태 또한 사회과학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차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이 통일 이전에 자유화 및 다원화로의 체제변동과정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체제의 구축보다는 舊體制의 破壞로부터 발생하는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아래서 교화된 북한지역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새로운 사회의 민주시민 의식구조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과거의 의식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의식구조를 형성시키는 二重過程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수반한다.<sup>2)</sup>

그러므로 통일시대에서 제반 갈등을 해소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무의식적인 합리화의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통합된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향을 배태할 수 있는 (신)정치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지 모른다. 사실 갈등은 조정될 수는 있어도 소멸될 수는 없으며 조화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이다. 문제는 통일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갈등이 構造化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며, 따라서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갈등은 새로운 국가에서의 남북한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는 긍정적인

2) 양성철,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권력지도층 변동분석과 체제변혁 전망 중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일성 이후 정책방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2. 4. 10), p. 58.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조국에서의 國民統合은 기본적인 삶의 양식, 즉 통치구조, 통치이념, 경제체제, 교육체제, 사회구조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오랜기간에 걸쳐 상이한 가치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통일한국사회에서의 價値統合은 두 가치체계의 단순한 종합이나 상호보완으로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가치통합은 오히려 우리의 전통문화(고유성)와 국제적 사조와 시대적 요구(보편성)의 종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남북한지역의 주민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는 작업은 결국 새 국가의 國民的 正體性(national identity)을 확립하는 일이다.<sup>4)</sup> 국민적 정체성 확립의 근간은 통일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새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라는 동질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이전 남북한주민들이 갖고 있는 동족의식이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共同體的 國民意識은

3) 임효선, "가치통합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226.

4) 통일독일에서의 정체성 확립노력에 대해서는 통일독일에 관한 특집으로 편집된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에 실린 Michael Mertes, "Germany's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Change Through Consensus?"; Anne-Marie Le Gloannec, "On German Identity";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등을 참조.

통일 이후 국가발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식이 단순히 민족단일성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통합은 단일성의 확대에서 찾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열린 미래를 맞는 준비로부터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한국은 우리의 역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진정한' 민족국가로서의 諸조건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만족시켜 나가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이며 안정된 민족국가를 만족시키는 제반 조건중에서도 특히 세가지 조건, 즉 첫째, 정치적 경계와 인종·문화적 경계의 일치, 둘째 합당한 수준의 사회적 동질성, 셋째 정부의 정통성(헌법적 콘센서스의 확립)이 중요하다.<sup>5)</sup>

통일한국은 일단 정치적 경계와 인종·문화적 경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民族國家의 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에서의 체제발전을 위한 합당한 수준의 사회적 동질성이나 국민적 콘센서스의 확립은 정치엘리트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은 두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수 십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상호 소외되었던 남북한주민간의 心理的

---

5) Peter Pulzer, "Unified Germany: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 3, no. 1 (April 1994), pp. 2-3.

統合過程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국민의 재형성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배타적인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로부터 탈피하는 일이다. 첫번째의 임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지역 국민들의 희생적인 물질적·도덕적 노력이 요구되며, 두번째의 임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 국민들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 희생속에서만 상호 의존할 수 있는 國民的 正體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몇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한간 분단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경제의 부진과 북한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南北韓의 統一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제환경의 변화도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가능성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남한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적용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한 남북한의 통일 은 주변국가들의 이기적인 헤게모니 추구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상황은 바로 한반도가 열강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하였던 지난 세기말의 경험을 다시 한번 초래하

게 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흔치 않은 民族發展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여건이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난국의 해결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즉 북한은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협조와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남한정부로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南北韓關係의 改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관계가 이념대립으로 지속됨으로써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점증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도 북한을 도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남한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추진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經濟協力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탈피를 위한 지원 강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평화정착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요한 요체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우리 민족이 협력과 공존의 시대적 흐름에 뒤쳐 지지 않도록 남북한관계가 民族統一을 위한 긍정적 동반자관계로 이행되는 것은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우리 민족도 주도적인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남북분단의 상황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남북한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民族共同體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 민족발전사의 공백기간을 메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주민에 보다는 남한국민의 손 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統一過程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民族共同體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구한말의 열강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國民和合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높은 결속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남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의 뿌리가 같고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양식이나 문화

적 바탕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社會統合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up>6)</sup> 그러나 반세기의 분단 역사는 남북한을 이념·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질적인 체제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질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남북한은 삶의 양식과 사회체제의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構造의 差異는 단시간에 그 간격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통합은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일의 꿈과 기대보다는 통합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대국민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즉 통일의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의 기회가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통일은 어떤 이론이나 방안 또는 일방의 의지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변화하는 역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體制力量은 그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政治的 統一은 또 다른 민족통합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즉 통일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과정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는 경제에 불필요한 개입이 아닌 한 국가가 좀 더 적극

6)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 (1994.5.2), p. 188.



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統一國家의 目標로 남북한지역 생활수준의 절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수단의 공유, 개인의 창의력 부재 등 사회주의 유산이 잔재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량공세를 해도 밀빠진 독에 물붓기의 형국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신속한 개혁에 의한 體制改革과 意識改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1. 單行本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2.
- 듀크, 제임스 T.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실 역. 「갈등과 권력: 갈등론적 사회학의 전개」. 서울: 법문사, 1985.
-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_\_\_\_\_ 「사회주의체제 개혁 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서울: 나남, 1992.
-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조감: 북한 상식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4.
-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송 북.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현대문화, 1991.
-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전망」. 서울: 나남, 1992.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코저, 루이스 A. 박재환 옮김.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1980.
- 통일대비정책연수단.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서울: 통일원, 1993.
- 통일원. 「통독2주년 보고서」. 서울: 통일원,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_\_\_\_\_ 「통일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한국정치학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 황성모. 「통일독일 현장연구」.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90.
-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제4권 다원사회의 성숙한 문화」. 서울: 21세기위원회, 1994.
- Baradat, Leon P.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 Impac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4.
- Birch, Anthony H. *Nationalism and National Integration*. London: Unwin Hyman Ltd, 1989.
- Coser, Lewis A.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 Dahrendorf, Ralph.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 Deutsch, M.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 Gurr, Ted 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Kriesberg, Leon. *Social Conflic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2.
- Ross, Marc Howard. *The Culture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Interes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Wilkinson, David O. *Comparative Foreign Relations: Framework and Methods*. Belmont: Dicken Publishing

Company, 1969.

## 2. 論文

김석준. “의회민주주의 제도화와 국가능력: 사회갈등, 체제·반체제세력 및 여야정당의 이익표출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1990).

문용린.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형성방안 모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 사회과학 학술토론회 논문집, 1993. 10. 28).

박광주.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서재진. “통일한국의 계급문제.”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안병만. “한국의 파워 엘리트 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 쟁점과 과제』. 서울: 법문사, 1993.

양성철. “북한권력지배층 연구, 1946~1990: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 성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1990).

\_\_\_\_\_.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권력지도층

변동분석과 체제변혁 전망 중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일성 이후 정책방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2. 4. 10).

이달곤. “국가운영체제: 권력분산, 지방자치 확대로 통일후를 대비.”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동아일보사, 1993.

이우영. “통일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임효선. “가치통합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전병재. “사회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 남북한 인성 차이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 학술회의 논문집, 1994.11.25).

한배호. “남북한 정치변화의 구조적 분석과 통일과정.”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한완상.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

- 울, 1992.
- 황병덕. “동서독 통합후 갈등문제.” 『평화통일연구』. 창간호. 서울: 세종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4.
- 메지에르, 로타 드. “독일통일의 비판적 고찰.”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Anne-Marie Le Gloannec, “On German Identit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 Deutsch, Karl W.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 3 (September 1961).
- Fulbrook, Mary.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 Hasegawa, Tsuyoshi. “The Connec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in Communist Regimes.” in Gilbert Rozman. ed. *Dismantling Communism: Common Causes and Regional Varia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Lowenthal, Richard. “On ‘Established’ Communist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7 (1974).
-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Mertes, Michael. "Germany's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Change Through Consensus?"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ulzer, Peter. "Unified Germany: A Normal State?" *German Politics*. vol. 3, no. 1 (April 1994).

Scalapino, Robert A. "The United States and Asia: Future Prospects." *Foreign Affairs*. vol. 70, no. 5 (1991).

Tarrow, Sidney. "Aiming at Moving Target: Social Science and Recent Rebellions in Eastern Europe." *PS*. vol. 24, no. 1 (March 1991).

Winkler, Heinrich August.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Winkler, Heinrich August. "Rebuilding of a Nation: The Germa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 3. 其他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Der Spiegel*.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Vier Jahre Deutsche Einheit.” 3, Oktober 1994 (1994. 9. 19),  
주독대사관, “독일 통일 4주년 보고서” (1994. 10).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值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方案 研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

## 統一 以後 國民統合方案 研究

研究報告書 94-34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

---